

DDA, 2005년 4월 농업협상 동향

DDA 농업협상은 7월 말 모델리티 1차 초안을 내겠다는 목표 아래 모든 의제들에 대한 1차 논의를 마치고 이제는 세부 기술적 쟁점에 대한 논의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농업협상에서는 협상의 3대 분야인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에서 동시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시장접근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여 모델리티 도출의 최대 관건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4월 13일부터 19일까지 열린 농업위원회에서는 종가세 상당치 전환과 관련하여 회원국간 논의가 심도있게 이루어졌으나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회의가 종결되어 협상 진전이 더욱 어려워졌다.

1. 종가세 상당치 관련 논의 동향

종가세 상당치(AVEs: Ad Valorem Equivalent)에 대한 논의는 당초 협상의 주요 쟁점이 아니지만, 시장접근분야에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선결요건이다. 지난 여름에 합의된 기본골격에 따르면 관세감축은 구간을 나누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tiered approach). 따라서 비종가세가 종가세로 전환되어야 각국의 관세구조가 파악되어 구간대 설정이 용이하다.

그런데 비종가세를 종가세로 환산하는 데에는 국제가격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100원/kg인 종량세가 가격을 기준으로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기준 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때의 수입가격으로서 어떠한 자료를 사용할 것인지를 놓고 EU, G-10 등 수입국과 미국, 호주 등 케언즈 그룹 간에 입장이 대립되어 왔다.

수입국 중 AVEs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국가는 EU와 스위스, 노르웨이 등이며, 특히 스위스는 대부분의 농산물이 종량세이기 때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스위스와 노르웨이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국들은 비종가세의 비중이 크지 않거나 가격자료에 따라 AVEs 변동 폭이 적어 큰 이해관계가 없으나 G-10 공조차원에서 스위스의 움직임에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었다.

비종가세를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수입국들은 높은 국제가격을 사용하여 AVEs를 가급적 낮추려고 하는 반면(이미 합의된 기본골격에 따르면 낮은 수준의 AVEs가 산출되어야 감축률도 따라서 낮아지기 때문임) 수출국들은 낮은 국제가격을 적용하여 가급적 높은 AVEs가 계산되기를 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가격자료는 WTO의 국제가격자료(IDB)와 UN의 국제가격자료(UN Comtrade)이며, 대체적으로 IDB에 근거한 국제가격이 Comtrade에 근거한 국제가격보다 높은 실정인바 수입국은 IDB를, 수출국은 Comtrade를 선호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IDB 자료를 기초로 수입가격을 산출하고 일부 IDB와 Comtrade간 차이가 존재하는 품목들(blips)은 따로 분류하여 조정을 하도록 합의하였다.

그런데 blips 품목들의 수입가격 조정 방법을 놓고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의견이 충돌하였다. 수출국들은 Comtrade 자료를 75, IDB 자료를 25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수입가격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수입국들은

50대 50으로 평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4월 협상에서는 수입가격 조정방안에 대해 회원국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FIPs(Five Interested Parties: 미국, EU, 호주, 브라질, 인도)라고 불리는 주요 5개국 비공식 회의를 통해 AVEs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스위스를 중심으로 한 G-10은 향후에도 협상의 중요 쟁점 타결과정에서 AVEs에서와 같이 G-10이 배제될 것을 우려하여 합의도출의 내용보다는 도출과정(process)을 문제 삼아 크게 반발하였으나, FIPs 합의안에 대한 검토협약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침묵으로 일관하여 FIPs의 합의안이 사실상 AVE에 대한 논의의 종지부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합의 내용을 기초로 문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가중치 적용 대상을 놓고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여 AVEs문제는 최종 단계에서 어이없게 결렬되고 말았다. EU는 왜곡된 수입가격을 조정하여 AVE를 계산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반면 나머지 4개국은 각각의 자료를 이용해 계산된 AVE를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VEs에 관한 합의가 결렬된 이후 EU의 농업국 국장(Director General for Agriculture)인 Rodriguez는 미국을 비롯한 FIPs의 나머지 4개국에 보내는 서신에서 미국이 이해하고 있던 방식으로 계산한 AVEs는 EU가 이해하고 있던 방식으로 계산된 결과보다 지나치게 높으므로 나머지 4개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전하였다.

또한 EU는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의장인 그로서 의장이 EU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 보다 편향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의장의 협상 진행 방식에 대해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EU는 FIPs에 의한 협상 절차가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며 FIPs 회의에 좀더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FIPs는 미국, 호주, EU, 브라질, 인도 등 주요 5개국을 지칭하는 말로서 농업협상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 EU, 케언즈 그룹, G20의 대표들이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협상 진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기본골격 합의시 수출입국간 합의점 모색이 난항에 부딪치자 FIPs가 비공식 회의를 가지고 합의를 이루어 낸 바 있다.

일부 몇몇 회원국으로만 이루어진 비공식 회의를 통해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절차에 대해 수입국들은 크게 반발하였으나 소규모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협상 진전을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FIPs에 의한 협상 진행 방식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AVEs 합의 결렬과 같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자 EU는 FIPs process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좀더 많은 회원국들, 즉 수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협상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뚜렷한 성과없이 4월 농업위원회가 종료된 이후 FIPs는 미해결된 기술적인 쟁점들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 짓기 위해 내주 초에 파리에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실무급 회의는 5월 2일, 각료급 회의는 3일에 열릴 예정이며 이는 4일에 열릴 미니 각료회의까지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파리 각료회의는 AVEs 타결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2. Food Aid 관련 논의 동향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식량원조가 우회적인 수출보조 내지 시장점유 확대수단이 되지 않도록 적절히 규제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위급상황이나 재난상황에서의 식량원조 등 진실한 식량원조(genuine food aid)까지 규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무엇이 진실한 식량원조인지에 대해서는 수출입국간, 그리고 수혜를 받는 개도국간에 의견차가 있어 이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4월 협상 최종일 Groser의장은 정리발언을 통해 향후 식량원조에 대한 규제는 부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나 동시에 개도국의 위급상황에서의 식량원조 등 genuine food aid의 필요성도 충분히 감안할 뜻을 밝혀 식량원조의 부분적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

3. 수출국영무역기업 관련 논의 동향

이번 4월 협상에서 EU 등 수입국은 수출국영무역기업이 갖는 간접적 수출보조 내지 수출시장 확대 효과를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수출국영무역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인 호주, 캐나다 등은 이를 적극 방어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개도국의 경우 수출국영무역기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며 수출국영무역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개도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향후 협상에서는 수출국영무역기업이 갖는 배타적 특권 및 정부로부터

의 각종 혜택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규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판단된다.

4. 블루박스 논의 동향

지난 기본골격에서는 블루박스의 기준이 추가되면서 새로운 블루박스가 탄생하였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경기조정직불제(CCP: Counter Cyclical Payment)를 염두해 두고 만들어낸 것으로서 브라질, 인도 등 G20은 새로운 블루박스가 대폭적인 AMS 감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수출국들은 새로운 블루박스가 AMS보다 덜 무역왜곡적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추가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 해당 품목의 생산을 요구하지 않을 것, ii) 기준 면적이나 생산량을 변경하지 말 것, iii) 한 품목에 AMS와 블루박스를 동시에 지급하지 않을 것, iv) 품목별 상한을 설정할 것, v) 목표가격의 설정 기준을 정할 것, vi) 가격차 보상 수준의 한계를 정할 것 등이다.

그러나 CCP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수입국들은 농정 개혁과정에서 블루박스가 가진 의미를 강조하며 블루박스의 추가 기준 설정에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협상에서는 G-20의 제안에 기초하여 수출국의 추가조건 공세가 지속되는 한편 이에 대한 대응이 미국, EU, G10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임소영 Isyjr@krei.re.kr 02-3299-4250 한국농촌경제연구원)